

거부권에 막혔던 ‘3대 특검법’ 의결… “진상·진실 규명되길”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李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내란심판·헌정질서 회복 조치”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도 의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이번 3대 특검법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후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몇 차례 국회로 되돌아간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4개, 대통령령안 3개, 일반안건 1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인원은 검사 특검 1명에 특검보 6명, 검사 60명이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되고,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을 둘 수 있어 3개 특검법 중 가장 많다.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포함)이다. 기본 90일에 30일씩 2회 연장 가능하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명태균씨가 관여된 각종 불법행로 인한 의혹 등 총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특검법은 205명 규모로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명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내란특검과 동일하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105명으로,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해병대원 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들을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매번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며 ‘대통령 거부권’은 사실상 무너진 장벽이 됐고, 그간 밀렸던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모양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3개 특검법 통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돼 현재

까지 남아 있는 내각 구성원들에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한순간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린 일이나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정부 성공” vs “내란종식·경제회복”

〈김병기 후보〉

〈서영교 후보〉

與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

김병기 “다양한 의견 듣고 조율
당·정·대 을지로위원회 활성화”

서영교 “경제 살리는 마중물 필요
협업체 꾸려 수시로 정부와 협의”

‘기호 1번’ 김병기 후보와 ‘기호 2번’ 서영교 후보가 10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와 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 기조연설, 공통질문, 현장 질문, 마무리 연설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뽐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재직 의원(167명)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의원 표 환산 시 약 34표)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한다.

서영교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했듯이 추경 30조원 만들어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들어내고 지역화폐 만들어내고, 기업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 풀어내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업체를 꾸리고 여야 정 협업체도 꾸려서 여러분께서 정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제 살맛 난다라고 하는 세상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경제 재도약



김병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26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조직은 물론 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능력을 갖췄다”며 “국회에 와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지난 수십 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던, 그리고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분석권을 박탈했다”고 자신했다.

또한 “내란 종식과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일당들에 대한 어둠을 거둬내는 일에는 일체의 타협 없이 마지막 조각한 조각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처리하겠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회를 맡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서의 목표를 묻자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도보 구축과 정치 복원”이라고 답했고 서 후보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꼽았다.

원내대표로서 당 내 다양한 목소리를

모을 방안을 묻자 김 후보는 ‘조화’와 ‘역지사지’를 열쇳말로 꼽았다. 김 후보는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다. 그런 원내대표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조율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서영교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의원이 하나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상임위가 수시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매달 협업체를 꾸리게 하겠다. 그리고 선수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마무리 연설에서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서 후보는 “한쪽의 내란 종식, 한쪽의 민생 회복 양날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만드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민의힘, 대선 패배 출구전략 ‘평행선’

김용태, 당 쇄신안 찬반투표 제안
친윤계 “전당원 투표 사안 아냐”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패배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져있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장장 5시간 동안 의원들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대선 후보 교체 사건 당무 감사, 전당대회 시기 등을 두고 자유토론을 벌이며 격론을 벌였으나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했고 김 비대위원장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0일 다시 의총을 열어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김 비대위원장의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과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주재 등으로 의총을 추후에 열기로 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은 ▲9월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 대선 후보 교체 과정 당무감사 실시 ▲당론 투표 사안에 대해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100%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담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 자신이 제안한 당 쇄신안의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에게 “제가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은 우리 당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마저도 저를 향해 개인의 정치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제가 임기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저는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바가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논의를 통해서 조만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이 대다수 반대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의 당무 감사와 관련 “당무감사를 통해 누구를 징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그날에 있었던 진상을 많은 당원과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절한 과정이 당무감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자신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두고 “앞으로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당원과 당직자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질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로서 이러한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친윤계 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에 김 비대위원장의 전당원 투표 제안에 대해 “전당원 투표는 대선 후보 교체 같은 중차대한 일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전당원 투표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에 관한 것이고 김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퇴하느냐, 6월말까지의 임기를 보장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